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Focusing on Linkage Mechanism

2016/11/02(수)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lsi@krila.re.kr



I. 서론

1. 연구 목적

□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과 경제성장은 상호 불가분 관계

- 경제성장은 재정 원동력, 재정활동은 국가·지역경제성장의 핵심요인
 -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재정지출(공공투자 등)의 경제성장 기여
 - 경제성장의 중앙·지방재정 수입확충 기여 등

□ 정부 재정시스템의 틀과 구조, 각종 재정정책은 국가·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영향 요인

- 재정 틀(수입, 지출, 적자재정 운영 등), 재정정책(조세·지출·채무정책 등),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따라 경제성장의 크기와 속도 영향

□ 연구 목적: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와 지역경제의 연계성 및 역학관계 파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 모색

-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거시적 틀/연계 메커니즘(*핵심내용) 제시
- 지역경제 성장/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 방향



1. 서론

2. 발표의 구성

□ 서론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기본관계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개요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관계: 이론적 관점과 한국의 현실 반영 틀(framework)
- 지역간 경제력 격차

□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연계 메커니즘(역학관계)

-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관계
-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성장의 연계 메커니즘
- 정부간 재정관계의 지역경제성장 영향(지역간 격차) 분석: 기초통계분석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향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1.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개요

1) 지방재정의 고성장과 기능 변화

□ 지방재정 규모(예산 기준)의 고성장

- 1995년 31조 5,960억원 → 2015년 173조 2,590억원(5.5배 증가)
- 1990년 기준 지방재정 규모 2배 증가 5년 소요; 1995년 기준 지방재정 규모 2배 증가 10년 소요; 2005년 이후 증가세 둔화

- 향후 저성장 기조 예상

□ 시대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기능 및 우선순위 변화

- 지방SOC 중심 구조(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 → 사회복지 중심 새로운 지출구조 정립(2000년대 후반 이후 현재)

- 향후 구조 공고화 가능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1. 지방재정 현황: 개요

2) 지방재정의 위상과 기능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위상(2016년도 예산 기준)

- 중앙재정 세입, 세출: 국가재정(중앙재정+지방재정)의 각 55.1%, 41.9% 점유
- 지방재정(일반자치단체) 세입, 세출: 국가재정의 각 44.9%(33.7%), 58.1%(43.9%) 점유
- 중앙·지방간 세입·세출 격차 발생원인은 중앙정부 재정이전 때문

※ 지방재정=일반자치단체 재정+교육자치단체 재정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표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입 및 세출의 연도별 변화추이(2004-2016)

연도	세입			세출			A-B
	중앙재정 (A)	지방재정		중앙재정 (B)	지방재정		
		일반	교육		일반	교육	
2004	57.8	31.7	10.5	48.4	37.7	13.9	9.4
2006	57.0	32.9	10.1	46.1	40.5	13.4	10.9
2008	54.5	34.9	10.6	40.3	45.1	14.6	14.2
2010	55.5	34.4	10.1	43.7	42.8	13.5	11.8
2011	56.0	33.5	10.5	42.8	42.5	14.7	13.2
2012	55.5	33.8	10.7	42.8	42.2	15.0	12.7
2013	55.9	33.2	10.9	42.6	42.1	15.3	13.3
2014	55.9	33.3	10.8	42.3	42.8	14.9	13.6
2015	55.7	33.7	10.6	42.5	43.1	14.4	13.2
2016	55.1	34.4	10.5	41.9	43.9	14.2	13.2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및 통합재정개요, 각 연도(임성일, 2015 수정 보완)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표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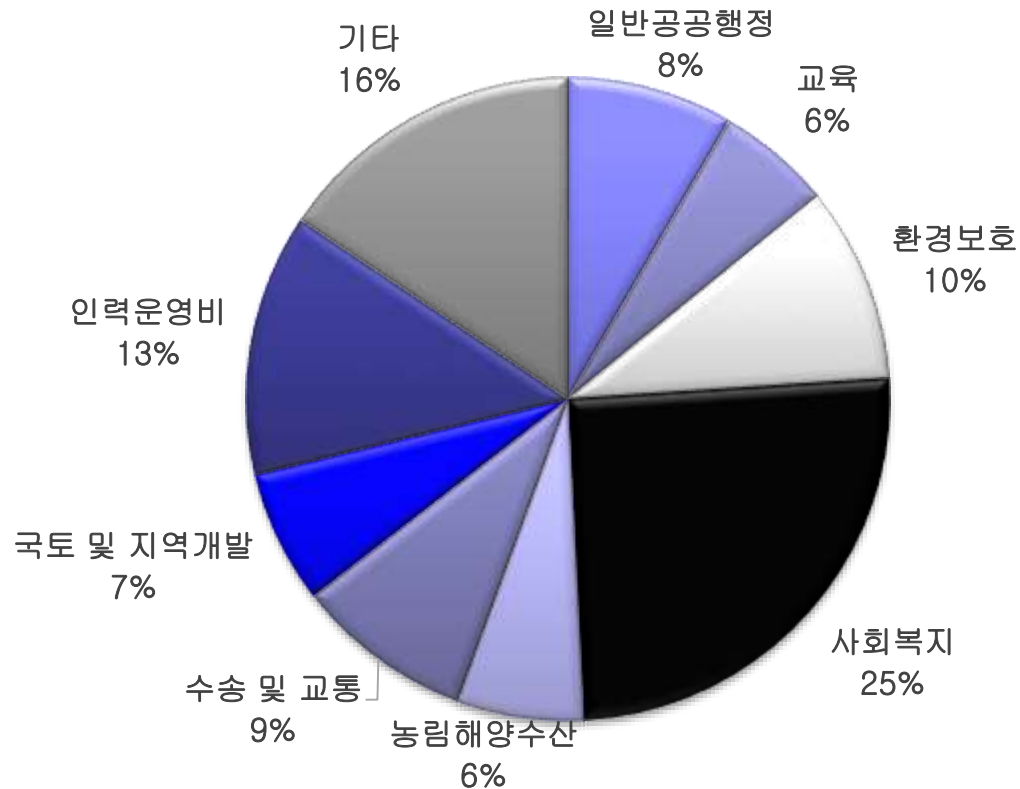
(단위: 억원)

예산규모: 480조 3,032억원(100.0%)						
중앙정부 295조 7,207억원 (61.6%)		지방자치단체 184조 5,825억원 (38.4%)				
		자체수입 (59.4%)			이전재정수입 (40.6%)	
국세	기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보전수입 등	지방교부세	보조금
2,229,372	727,835	648,401	218,326	37,766/ 191,615	319,527	430,191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6.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그림 1> 지방재정의 세출내역(2016)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6

주: 기타(16%)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1.9%), 문화 및 관광(4.9%), 보건(1.6%), 산업·중소기업(1.9%), 과학기술(0.3%), 예비비(2.4%), 기본경비 등(2.7%)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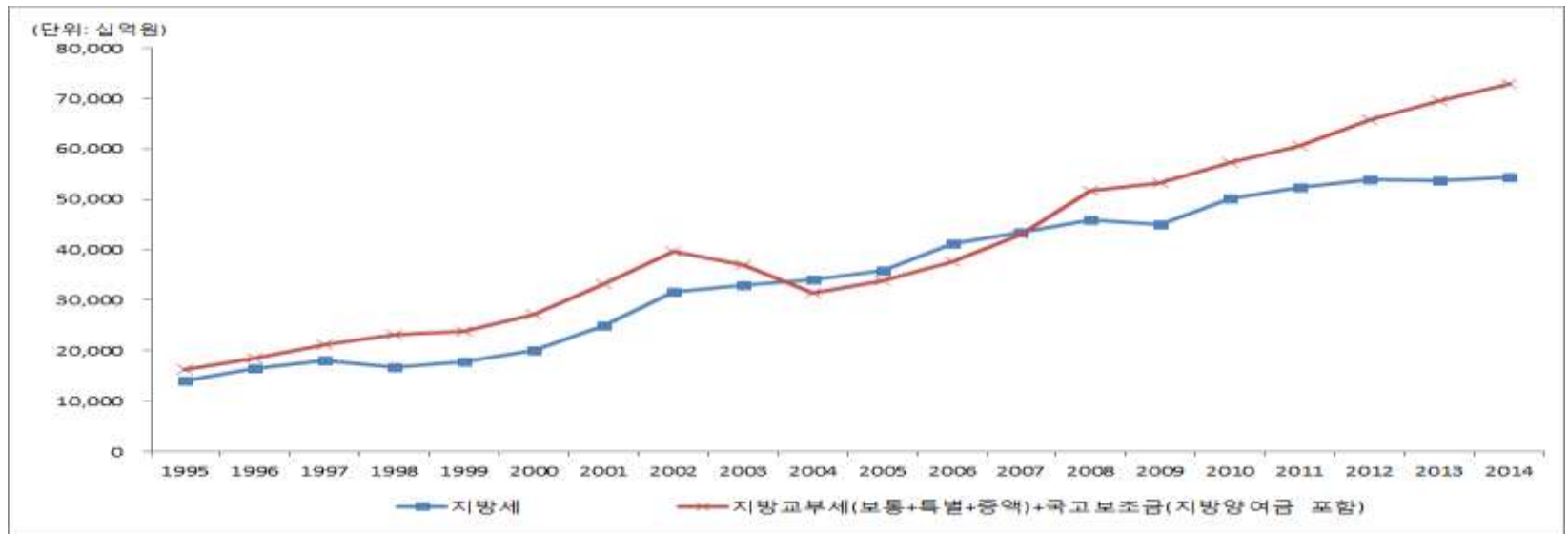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3) 이전재정 주도형 지방분권

□ 지방재정의 고도성장 견인주체는 중앙정부 재정이전제도

-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방재정은 재정이전제도 주도체제 정립
- 2016년 현재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핵심구조로 위상 정립

<그림 2> 지방세수입과 이전재정수입의 연도별 변화 추이(1995-2014)



자료: 임성일(2015)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 지방교부세제도, 국고보조금제도 중심의 재정이전시스템

- 지방자치 실시 후 다양한 제도변화(신설, 폐지)를 거친 다음 현재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양대 축 체제 정립; 실제 운영상황은 다기화, 복잡성
- 2008년 기점으로 국고보조금 주도 경향(새로운 구조 부상)
 - 일반보조금(general grant) 주도형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 주도형
 - 지방의 재정의사결정권한 위축, 의무적 매칭부담 급증
 - 국고보조율 저하(지방비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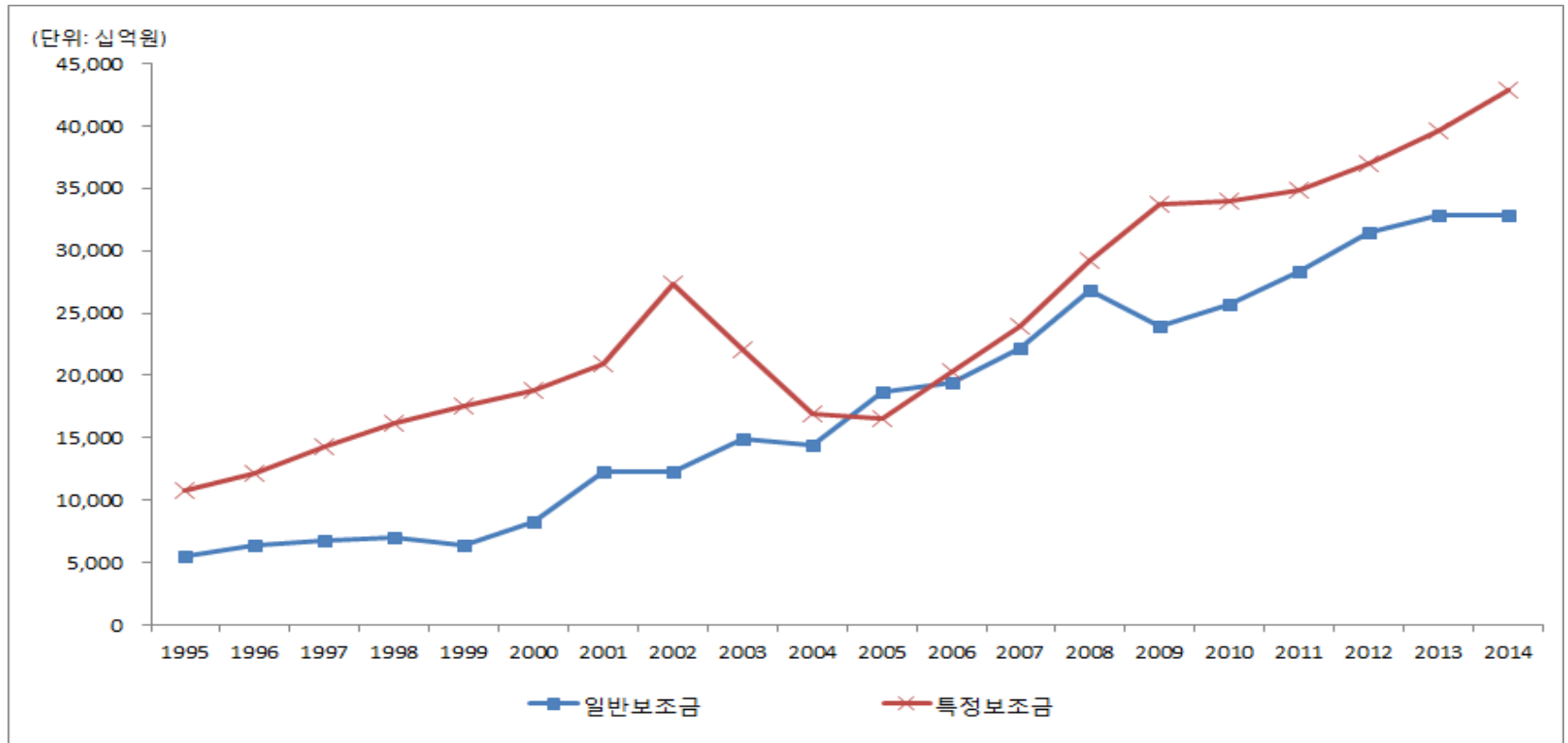
<표 3>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 점유비율과 국고보조율

	1994	1996	2005	2007	2013	2014
국고보조금 지방재정 점유비율(%)	13.3	17.3	25.0	28.5	35.1	37.2
국고보조율(%)	61.0	60.3	66.6	65.3	60.0	61.8

주: 이남수(2014),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2014)을 토대로 산정(임성일, 2015 인용)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그림 3>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규모 변화



주1: 지역상생발전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미 포함

주2: 일반보조금에는 지방교부세 포함; 특정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포함(임성일, 2015)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 지방이전재원 전망(2016-2019 중기재정계획, 기획재정부)

- 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는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5.6%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과 복지지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표 4> 지방이전재원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3	77.4	82.8	88.3	92.5	5.6

자료: 기획재정부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 지방채 발행제도

- 발행 잔액(저량(stock)), 원리금 상환(유량(flow)) 측면에서 건전재정 유지
 - 채무감당능력(debt affordability) 범위 내의 지방채 발행;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호한 건전재정
 - 지방채 발행잔고: 지난 20년간 매년 GDP 대비 2-3% 미만 수준 유지
 - 다만,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부채(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수준에 문제 노정
- 20개 내외의 적극적 활용단체(특히, 소수 광역자치단체) 주도

<표 5> 지방채 현황(2015~2019)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채 발행액	43,097	43,718	82,008	52,607	64,196
지방채 잔액 (증감율)	277,152 (△2.9%)	267,559 (△3.7%)	261,497 (△2.3%)	277,071 (△2.1%)	276,915 (△0.1%)

자료: 행정자치부

주: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 유지, 다소 감소 전망(중기재정계획, 2015~2019)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경제성장 동력 차이

□ 지방재정의 지역경제성장 견인력은 국가재정에 비해 제한적

- 지방재정의 세입역량(revenue capacity) 제약
 - 조세구조(국세, 지방세 비중): 약 8 대 2 국세 편중
- 재정지출 권한(spending power) 중앙정부 집중
 - 지방재정지출 의사결정의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
 - 국고보조사업 활성화: 지방비 매칭(matching)부담,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정책수단 제약과 역량 취약
 - * 한국의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은 수입, 지출 양 부문 모두 취약한 수준(‘집권적 분권‘)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1) 지방재정의 지역경제성장 동력: 수단과 경로

□ 지방재정의 지역경제 영향 수단 및 경로

- 재정의 수입, 지출, 채무/기타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진작(국가재정과 유사)
- 이전재정수입(교부금·보조금)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국가재정과 차이)
 - * 조세 주도형, 보조금 주도형 재정형태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상이

(1) 재정수입과 지역경제성장

□ 재정수입부문과 지역경제성장

-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율/세원(과세기반), 비과세·감면 등 조세제도/정책
 - 각종 기업 우호적 조세정책(감세, 비과세·감면, 기타 투자우대조치)에 의한 민간투자여력 확대, 성장 강화
 -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자금 흡인)에 의한 지역경제 마이너스 효과(지방세·세외수입의 민간자금 흡수)
- => 적정 조세정책 조합(optimal tax/policy mix) 선택 중요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 지방세 비중 취약, 과세권 제한, 지방세 정책과세기능 수행(국가 종속)으로 조세 제도/정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영향 범위/파급효과는 제한적
- 지방세 정책과세 기능: 취득세 영구 인하, 지방이 원하지 않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각종 부동산관련 정부정책 수행(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영향)
- 조세부담률(2014): 18.5%(국세 14.4%, 지방세 4.2%), 국민부담률 24.6%

<표 6>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점유비중(%)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2005	2007	2008	2010	2012	2014	2016
국세	88.3	87.8	80.8	78.8	81.9	76.7	78.0	78.8	78.6	78.3	79.0	76.9	77.5
지방세	11.7	12.2	19.2	21.2	18.1	23.3	22.0	21.2	21.4	21.7	21.0	23.1	22.5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주: 2014년까지는 결산, 2016년은 당초예산(순계) 기준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2)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 지출부문과 지역경제성장

-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지출활동(경제적, 성질별 지출)은 경제성장 동력
 - 기능별 지출: 13개 분야 52개 부문 기능(IMF/UN 기능별 분류) 수행
 - 성질별 지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
 - 행정목적별 지출: 정책사업(전체의 약 80%),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약 20%)
 - 기타: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경상지출(operating expenditure)
- 재정지출 확대·축소
 - 특히, SOC 분야 등 자본투자지출 확장조치, 자본투자형 민간보조금 활성화 조치는 승수효과(multiply effect)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재정 조기집행: 경제의 투자자금 회전 선순환 도모
 - 단기 효과 가능, 중기 효과 불투명
- 교육, 사회복지지출,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 관련 지출의 일부도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기업부담 완화, 사회통합 시너지, 고용진작 등)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연구 논문

- 지출 성격(유형)에 따라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긍정·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전 가설/사후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 다수
- 대표적으로 Barro(1990), Deverajan et al.(1996), Kneller et al.(1999) 등; 정부지출을 "생산적 지출(productive public expenditure)"과 "비생산적 지출(non-productive public expenditure)"로 구분 접근
 -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지출: 교육, 복지(생산적 복지사업), SOC 투자 등
 - 비생산적 지출: 경상적 지출, 시민복지에 국한된 지출(Gemmell et al.)

□ 국내연구: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제한적 실증 분석

- 대부분 전체 재정지출/기능별·성질별 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 역학관계 규명에 치중
 - 주만수, 2001; 김제안·채종훈, 2006; 오병기, 2007; 왕지훈·이충열, 2009; 김종구, 2009; 송명화 외, 2010; 김의섭 외, 2011; 문병근·성상기, 2011; 최병호·이근재, 2014; 문시진 외, 2016 등
- 문제점: 각 재정지출 특성(경상지출과 자본지출, 실제 지출운영 메커니즘 검증 등)에 대한 심층연구 없이 이용가능한 통계를 그대로 활용(현장 적용성 미 고려)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3) 채무재정(debt financing)과 지역경제성장

□ 지방채와 지역경제성장

- 적극적 지방채 발행, 기존채무 조기상환, 차환정책도 일정 수준 지역경제 진작
 - 지방채 발행(채권, 직접 차입 등)은 민간자본 흡수; 공공자금 활용 시 구축효과 없음
 - 지방채를 구입(또는 용자)한 민간부문은 수익(이자수입 등)을 통한 투자자금 확충
 - 지방채 규모, 차입선, 이자율, 상환기간 등 차입조건에 따라 지역경제 효과 상이

□ 정부간 재정이전(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과 지역경제성장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이전재정수입 확보; 이 중 상당 부분 지역경제성장 유발
 - 소수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서울 포함 7개 수도권 자치단체); 절대 다수 교부단체
 -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수혜대상: 지방비 부담(matching) 의무
- 중앙정부 재정이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보조금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상이
 - 재정이전의 성격에 따라 소득효과(income effect)/가격효과(price effect) 발생
 - 이전재정수입이 투자지출에 사용될 경우 승수효과(multiply effect) 등 유발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4) 기타 정책과 지역경제성장

□ 기타 지방재정정책 및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성장

- 재정투명성(transparency)
- 정보 비대칭 해소
- 부정·부패 방지 및 감소 노력
- 예산회계시스템 개혁(공공투자 효율성 및 형평성 향상)
- 성과관리시스템(공공투자 효율성 향상)
- 튼튼한 중기재정(지출)계획의 수립·이행(지속적, 예측가능한 공공투자 유도)
- 규제완화: 건전한 규제완화는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원동력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표 7> 지방재정(정부간 재정관계 포함)과 지역경제 관계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민간자원)	지역경제 효과
수입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수입 증가(세입 확충) 감세, 비과세감면 등(세수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민간자원 감소(구축효과) 조세인센티브 등 민간투자유인 	마이너스(-) 플러스(+)
	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수입 증가(세입 확충) 사용료수수료부담금 우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민간자원 감소(구축효과) 세외수입 인센티브 민간투자진작 	마이너스(-) 플러스(+)
	재정이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수입 증가(세입 확충) 일부지방비 매칭의무(자원 경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단위 민간자원 감소(*구축효과) 지방단위 민간자원 불변(일부 감소) 지방투자자원 증가·민간자원 시너지 효과 	플러스(+) * 다만, 비생산적지출 매칭의 경우 일부 마이너스가능
부채	지방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수입 증가/부채 증가 재정수입 감소/부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원 감소(민간자본 일시 공공이전) 민간자원 증가(민간부문 이자수입 등 수익) 	마이너스(-) 플러스(+)
지출	재정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자원(재정)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원 증가 	플러스(+)
	조기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자원(재정)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 민간자원 증가, 지역경제 자극 	단기/일시 플러스(+) 중기효과 불투명
기타	재정투명성/부정부패 방지/재정규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불변(일부 변동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감소 사회적 시너지통합효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가 	플러스(+)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표 8> 시·도별 지역경제 관련 주요 변수(2014)

	GRDP(백만원)	GRDP 점유비중	1인당 GRDP(천원)	지방세수입/ GRDP(%)	세입/GRDP(%)
서울	328,660,905	22.1	33,229	4.4	7.3
부산	73,673,589	5.0	21,593	5.4	12.8
대구	46,523,673	3.13	18,913	5.6	12.9
인천	69,500,613	4.7	24,315	4.6	11.6
광주	31,294,674	2.1	20,643	4.6	12.2
대전	32,798,844	2.2	21,219	4.7	10.7
울산	67,018,137	4.5	58,880	2.4	4.6
경기	329,558,989	22.2	26,836	4.6	9.7
강원	37,170,302	2.5	24,763	4.0	22.7
충북	49,790,670	3.4	31,807	3.3	13.5
충남	105,002,395	7.1	47,597	2.5	9.2
전북	44,242,680	3.0	24,620	3.7	20.4
전남	62,456,718	4.2	35,520	2.8	20.0
경북	92,697,180	6.2	35,107	3.2	15.1
경남	101,028,435	6.8	30,866	4.2	13.3
제주	14,086,861	1.0	24,243	6.5	21.5
평균	92,844,042	6.3	30,009	4.2	13.6
표준편차	95714314.63	0.064	10660.84	0.011	0.052
변이계수	1.031	1.031	0.355	0.272	0.382
최대	329,558,989	22.18%	58,880	6.5	22.7
최소	14,086,861	0.95%	18,913	2.40	4.6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표 9> 시·도별 지방세수입/세입/세출의 GRDP 대비 비중(평균, 변이계수, %)

	1990	2000	2010	2014
지방세/ GRDP	3.0%(0.214)	3.0%(0.300)	3.8%(0.248)	4.2%(0.272)
세입/ GRDP	12.8%(0.221)	14.4%(0.350)	16.1%(0.396)	17.1%(0.402)
세출/ GRDP	9.4%(0.256)	10.5%(0.374)	13.4%(0.397)	13.5%(0.396)

주: () 안의 수치는 변이계수를 의미함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3. 지방재정의 경기 대응성

□ 국가재정은 적극적 경기대응 역할 수행, 지방재정은 매우 제한적 역할 수행

- 각 국은 재정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정책 추진
- 한국 상황에서는 지역/지방단위의 적극적 경기대응정책 추진에 근본적 제약
 - 지방재정의 낮은 GDP 점유비율(연도별 10-13% 내외)
 - 국가재정 대비 낮은 지방재정 비율(지방교육재정 제외)
 - 수입·지출 양면의 낮은 의사결정 권한(과세권·지출권의 중앙정부 집중)
 - 독자적 재정정책 역량 및 수단 부족

* 지방재정 GDP 점유비율(중앙재정 GDP 점유비율)

* 1995년 9.7%(19.3%), 2005년 13.2%(23.7%)로 크게 증가 후 감소 추세(2011년 11.4%(22.1%))
(2014년 지방세출 기준 13.5%)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 지방재정의 경기 대응성 제약 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taxing power) 취약: 독자적 조세정책 사용 제약
 - 세율/세원의 자율적 조정 제약, 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제약(지방의 자율조정 약 5%, 나머지 약 95% 국가 주도), 조세수출(tax exporting) 부재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권한(spending power) 제약: 중앙집권적 세출권한 안배
- 지방의 채무재정(debt financing) 규제
 - 지방채 총량규제(총액한도제), 낮은 지방채 비중(지방채 잔액 GDP 2% 내외, 연도별 5조원 내외 발행), 적자공채 발행(경상경비 총당) 금지("golden rule") 등
- 기본적으로 대다수 지역이 ‘소규모 재정(small finance)’ 운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비교적 큰 재정·지역경제 권역, 그 외는 소규모 재정·경제 권역

종합: 한국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성은 국가단위에서 가능; 지방단위는 국가정책의 보완적/ 협력적 역할 수행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 근년의 지방재정 경기대응/지역경제 활성화 조치

-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 2009년 이후 지속적 중앙·지방재정의 상반기 집행 강화(문제: 관행화에 따른 효과 감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대응을 위한 한시적 지방채 발행 확장조치

- 연도별 종전 4-5조원 대에서 약 11조원으로 1년간 확대, 일부 경상경비 보전
- 지방채 발행총액: 2008년 19.0조원 → 2010년 29.0조원 급등 후 감소(2014년 28.0조원)

- 정부의 확장적 예산편성(예: 2015년 중앙·지방의 추경 확대(약 26조원) 및 집행률 제고)

- 2016년 지방재정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율 56.5%(95.3조원, 45개 통계목 사업)

- 경기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SOC, 일자리 분야 중심 추진(일부 서민생활안정 포함)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기재부): 정부지출(소비, 투자)의 직접적 성장 보완, 민간부문 파급(2차 효과: 민간 소비·투자 유발 승수효과)을 통한 경기회복 진작

- 예) 2015년 3/4분기 정부투자지출 확대에 따른 정부부문 기여도 상승(0.9%p)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1. 한국의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GFR) 현황

□ 정부간 재정관계(IGFR)의 개념/틀

- 정부간 재정관계는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연방/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간에 세입, 세출, 재정이전, 채무, 재정관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제도적 구조와 재정운영을 망라(<표 10> 참조)

□ 정부간 재정관계(IGFR)와 지역경제 성장

- 정부간 재정관계의 요소들은 대부분 지역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특히 중앙정부 이전재정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중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원 부족, 과세권 제약으로 조세정책에 의한 지역경제 진작 한계
- 적극적 공채정책 실시 불능: 지방채 발행 통제(총액한도제)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표 10>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재원배분 체계의 주요 관계요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계상태	재원배분관련 주요과제
세입 (자체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제도 - 국세 - 조세(국세)비과세·감면 -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징수기관: 국세청 · 국가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제도 - 지방세 - 지방세 비과세·감면 - 조세지출 * 징수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지방세 배분 및 운영 · 징세행정체제 · 세외수입관련 법규규제감축
재정이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부담금 · 지방교부세(일반/교육) · 국고보조금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방교부세에는 부동산/소방안전 교부세제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비보조금(도→시·군) · 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도→시·군) · 조정교부금(특별·광역시→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재정제도구조 및 운영방식 · 재정인센티브제도
채무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발행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발행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 발행승인·규제 · 지방채 지원정책금융(재원, 이자율, 상환조건·기간 등) · 감채기금 정책
지출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법등 지출사항 · 예산편성지침 · 국가재정관리제도 - 중기재정계획 - 예비타당성분석 - 통합재정분석 - 성과관리·감사 - 기타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등 지출사항 · 예산편성지침 · 지방재정관리제도 - 중기재정계획 - 투자자심사제도 - 재정분석진단제도 - 성과관리·감사 - 기타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자기 책임성 제고 · 예산회계제도 개편 · 재정정보화시스템

주: ◎, ○, △는 한국현실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중앙·지방간 재정연계 상태가 각각 높음, 보통, 낮음을 의미함(임성일, 2012 수정·보안)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2.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성장의 연계 메커니즘: 중앙정부 이전재정 중심

1) 중앙정부 이전재정제도

□ 중앙정부 이전재정(보조금)은 지역경제,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주요 영향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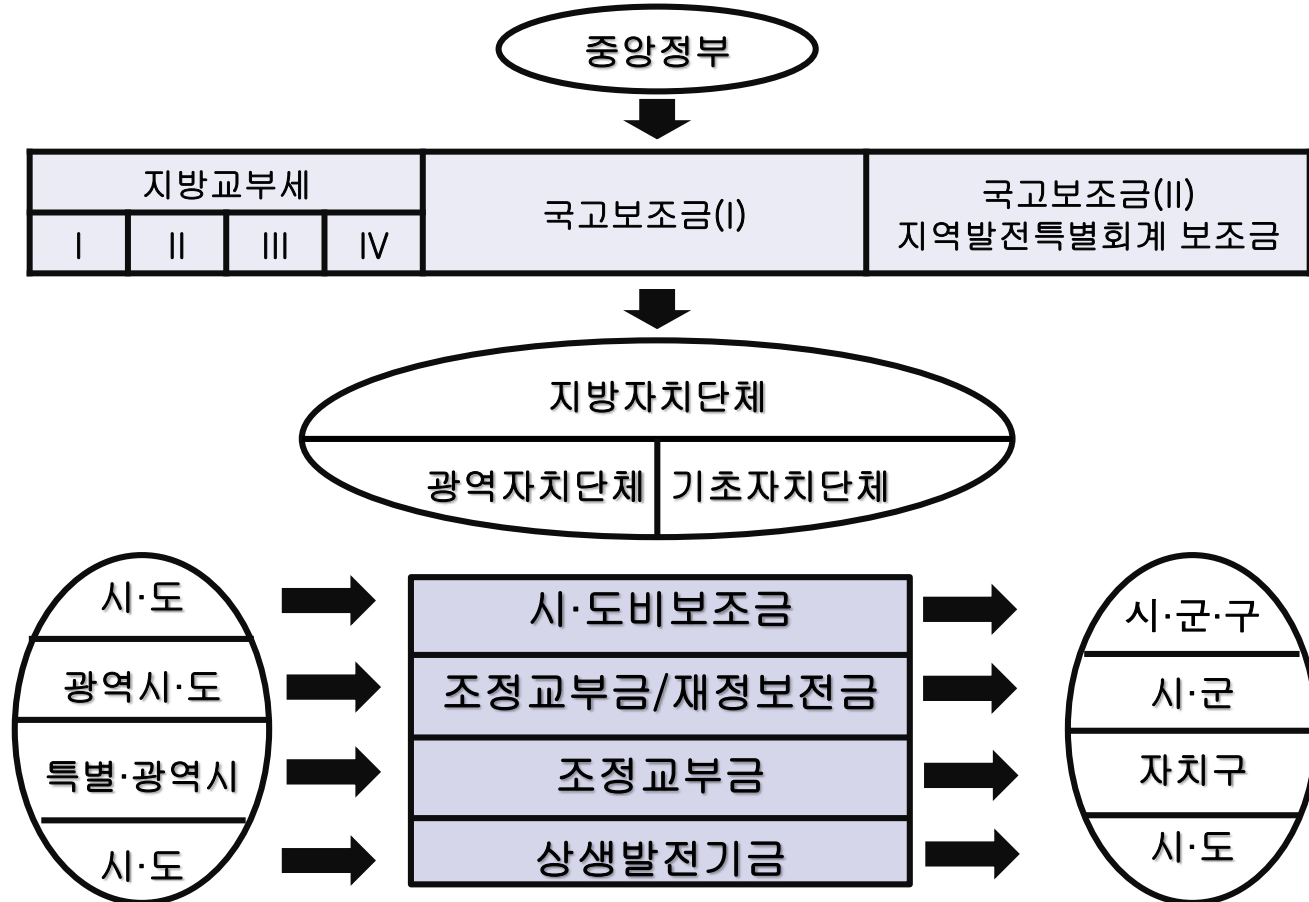
- 이전재정의 지역경제 영향은 자금의 규모, 성격, 용도, 국가정책 연계성에 의해 다르며, 이론적으로는 소득효과와 가격효과, 승수효과, 구축효과와 연관
- 중앙정부 이전재정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 영향 여부 확인(임성일, 2013 등)
- * 중앙정부 이전재정의 영향 경로/영향 정도(수준) 파악 연구 희소

□ 지방재정의 양대 축은 지방세와 중앙정부 이전재정

- 양자의 중요성과 점유비중은 지역별로 크게 다름
- 대도시형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이전재정이 지방세수입을 능가(이전재정 주도형 재정분권)
- 대도시형 자치단체는 자체수입 주도형, 그 외는 재정이전수입 주도형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그림 4> 정부간 재정이전제도



주: I, II, III, IV는 각각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의미함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 이전재정시스템은 재정의 효율성·형평성 기제 내포, 상당 부분 지역경제 성장 영향력 내포

- 지방교부세제도(재원보장, 재정형평화 기능)의 배분과정에서 지역 간 재정력 격차와 지역재정수요 반영
- 국고보조금제도(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포함)는 국가·지방 이해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제도의 급팽창, 차등보조율제도 적극적 실시
 -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기능 강화
 - 지방의 매칭부담 증가/지출용도·규모 제약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2)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 지방교부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방교부세는 지역경제성장, 지역 간 재정력·경제력 격차 조정에 크게 기여

- 재원보장(재정지원)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감안한 용도 없는 총액(lump-sum) 배분은 수혜지역에 소득효과(income effect) 창출
 - 지역경제 파급효과 잠재력 내포; 지방의 자본투자 역량 강화
- 재정형평화기능: 재정취약지역 중심으로 사용용도 없는 재정을 총액 지원해줌으로써 소득효과 창출과 함께 지역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
 - 국민세금 중 일부가 재정양호지역(재정취약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게(많이) 배분; 지역경제 파급효과 잠재력 내포
- * 지방교부세가 창출하는 지역 소득효과 중 어느 정도가 지역 내 자본투자에 사용되는데 따라 지역경제 성장효과의 크기 결정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 지방교부세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와 무관, 지역경제성장 기여 가능성 높음

-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기반은 구축효과와 관련이 있음
 - 이는 국가경제단위나 특정지역단위에서 조세징수가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타당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재정이전(지방교부세)을 통해 재정지출을 하는 경우 수혜지역의 민간자원을 징발하여 민간의 투자여력을 떨어뜨리는 구축효과와 무관
- ⇒ 지방교부세의 지출용도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 수준과 역량이 결정됨

※ 중앙정부 재정이전(교부금, 보조금)의 재원이 국세수입임을 감안하면, 국민경제 차원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발생; 적정조세 선정문제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 지방교부세의 지역경제성장 파급효과

- 지방교부세의 지역경제성장 파급효과는 수혜단체의 재정상황, 교부세 자금의 구체적 지출용도에 의해 결정
- 수혜지역의 새로운 공공소득은 궁극적으로 경상지출과 투자지출 형태로 사용; 지출조합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판단에 의해 결정
 - 일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양호 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은 자본지출(경상 지출)에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
- * 지방교부세의 실제 사용정보(지출용도, 금액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이용가능 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추정 가능(* 현재는 정보이용 불가능)

□ 지방교부세의 시·도 지역별 배분실태(부록 참조)

- 총액기준: 전남, 경북 등이 가장 많이 받고, 서울, 울산 등이 가장 적게 받음
-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7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재정자원의 지역별 재분배이나, 사실상 지역·개인 간 소득재배분에 해당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2) 국고보조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국고보조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방교부세와 달리 정률 특정보조금(matching specific grant)의 성격을 지니는 국고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포함)은 지역에 소득효과 외에 가격효과(price effect) 유발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matching) 부담은 가격효과 유발; 때로는 구축효과 수반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금 등 민간자금 징발 시 구축효과 발생
 -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외에 지역경제 저해의 양면성 내포
- 만일 국고보조사업 중 Barro(1990, 1992) 등이 지적한 '비생산적 재정지출'(이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사업이 많을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는 미미하거나 부정적일 수 있음(임성일, 2013)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 국고보조금의 소득효과와 가격효과

- 소득효과와 가격효과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특정 지방공공재 구입에 제한 발생
 - 국고보조금의 소득효과는 지방교부세의 소득효과(수혜지방의 임의 사용)와 다름
 - 지방교부세에 의한 지출활동은 민간부문의 투자·생산성 향상 지출을 자치단체가 임의 선택 가능; 국고보조금은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자치단체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지출활동을 임의로 조절, 결정할 수 없음
- 다만,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경제 성장효과 창출사업: 도로,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 지방 SOC 투자사업 관련 재정지출은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 유발

□ 국고보조사업 현황(2016년 기준)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전체 보조사업 절반 이상), 농림수산, 건설교통, 환경 관련 국고보조사업(전체 보조사업 30% 이상) 주도
 - 근년에 SOC 투자사업 비중이 줄고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급증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감소 경향
- * 영유아보유사업 등 노동력(인구) 증가/일자리 창출 관련 대형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앞으로 지역경제력,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3) 주요 정부간 재정관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경제성장은 민간부문 지출(소비, 투자), 자치단체 지출(소비, 투자)에 의해 결정

- 소비지출: 지역주민(지역기업)과 비지역주민의 소비지출을 구분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 지출(소비, 투자)은 측정(산정) 가능한 지역지출

□ 정부부문 경제성장 기여

- 한국은행(2013)에 의하면 2001~2012년 기간 중 성장기여율은 내수 75.9%, 순수출 24.2%로 구성
- 내수: 민간소비 41.4%, 정부소비 15.8%, 투자 18.7%
- 2014년, 2015년(잠정)의 경우 민간최종소비지출(정부최종소비지출)은 각각 50.3%(15.1%), 49.5%(15.2%)(한국은행)
- 2015년도 경제성장(연평균 성장률 2.6%) 중 정부부문 기여는 0.8%(KDI)
- 추경등 재정보강(재정확대정책)에 의한 정부기여 매우 큼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1)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지역간 격차): 기초통계분석

□ 지방재정/재정이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기초분석

- 지방재정 및 재정이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지역간 격차)에 관한 기초통계분석을 다음 변수 중심으로 실시
 - 세입,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수입, 세출(순계), GRDP, 자본지출, 부가가치, 소비지출
- 분석대상: 시·도(광역자치단체)
- 데이터: 10년 단위(1990, 2000, 2010) 및 최근 이용가능 통계(2014) 활용(통계청,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등)
- 분석방법: 기초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등), 상관관계분석 등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1)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지역간 격차): 기초통계분석

□ 시·도별 세출(순계) 분석결과

- 시·도별 지역간 격차의 중장기 경향은 총액기준 시 악화 후 완화, 1인당 기준 시 악화(심화) 경향
- 서울의 세출 점유비중은 뚜렷한 감소, 수도권은 조금 증가 경향
- 의미와 진단: 서울 점유비중 감소, 전국적 1인당 공공서비스 격차 확대 가능

<표 11> 시·도별 세출총액(순계)의 지역간 격차 변화 추이(변이계수)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총액	0.730	0.768	0.747	0.714
1인당	0.200	0.305	0.367	0.362
서울(수도권) 비중(%)	20.1(37.1)	18.6(38.8)	15.7(38.9)	14.6(38.1)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 시·도별 세입 및 지방세수입 분석결과

- 시·도별 세입의 지역간 격차는 총액기준 시 중장기 완화 경향(개선), 1인당 기준 시 중장기 확대 경향(악화)
- 지방세의 경우 중장기 지역간 격차는 총액기준 시 확대 후 완화 경향, 1인당 기준 시 크게 완화(개선)
- 서울의 세입·지방세 수입 점유비중의 중장기 축소
- 의미와 진단: 지역간 세수격차, 경제력 격차 심화 가능성(총량 기준)

<표 12> 시·도별 세입 및 지방세수입의 지역간 격차 변화 추이(변이계수)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총액	0.814(1.215)	0.767(1.277)	0.751(1.240)	0.713(1.150)
1인당	0.181(0.255)	0.300(0.223)	0.380(0.190)	0.383(0.162)
서울(수도권) 비중(%)				
-세입	22.4(40.4)	16.4(38.7)	14.4(38.4)	13.2(36.9)
-지방세 수입	32.8(53.4)	30.5(56.7)	25.7(56.3)	23.6(53.7)

주: 총액·1인당 수치 중 () 안의 수치는 지방세수입을 의미함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 시·도별 GRDP, 부가가치

- 시·도별 GRDP의 지역간 격차 증장기 경향은 다소 혼조
 - 총액 기준 시 지역 격차 심화 후 현상 유지, 1인당 기준 시 지역격차 심화 후 조금 완화(증장기 확대 경향)
- 시·도별 부가가치의 지역 간 격차는 총액기준, 1인당 기준 모두 조금 확대 경향(악화)
- 서울의 GRDP 점유비중 조금 감소, 수도권 조금 증가
- 의미와 진단: 수도권 경제력 집중현상 계속 진행

<표 13> 시·도별 GRDP 및 부가가치의 지역간 격차 변화 추이(변이계수)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총액	0.991(0.985)	1.028(1.042)	1.023(1.029)	1.031(1.043)
1인당	0.181(0.163)	0.372(0.288)	0.404(0.343)	0.355(0.323)
서울(수도권) 비중, %	25.9(47.5)	25.0(48.4)	22.9(48.8)	22.1(49.0)
지방세 서울(수도권), %	32.8(53.4)	30.5(56.7)	25.7(56.3)	23.6(53.7)

주: ()안의 수치는 부가가치



Ⅲ.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역경제 성장(활성화)의 연계 메커니즘

□ 시·도별 소비지출

- 시·도별 소비지출의 지역간 격차 증장기 경향은 총액기준, 1인당 기준 모두 조금 확대 경향
- 서울의 소비지출 점유비중 조금 감소, 수도권 점유 비중 확대
- 의미와 진단: 수도권 중심의 소비주도 경향 확대

<표 14> 시·도별 소비지출 지역간 격차 변화 추이(변이계수)

	2000년	2010년	2014년
총액	0.956	1.069	1.039
1인당	0.043	0.079	0.087
서울(수도권) 비중, %	23.0(46.7)	23.6(50.9)	22.1(50.0)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 자본지출, 지방세 비과세·감면

- 시·도별 자본지출의 증장기 경향은 총액기준 시 악화 후 완화 경향, 1인당 기준 시 상당한 수준의 확대 경향(증장기 악화)
- 시·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증장기 경향은 총액기준 시 격차 확대, 1인당 기준시 격차 감소
- 서울과 수도권 점유비중 큰 폭 감소(특히, 서울)
- 의미와 진단: 지방재정의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더 향상

<표 15> 자본지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증장기 지역 격차(변이계수)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총액	0.704(n.a)	0.768(0.961)	0.720(1.216)	0.651(1.143)
1인당	0.238(n.a)	0.413(0.274)	0.548(0.180)	0.586(0.189)
서울(수도권) 비중, %	18.6(37.0)	16.4(37.4)	10.8(34.5)	8.5(30.4)

주: ()안의 수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n.a는 자료이용이 어려움을 뜻함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 지방교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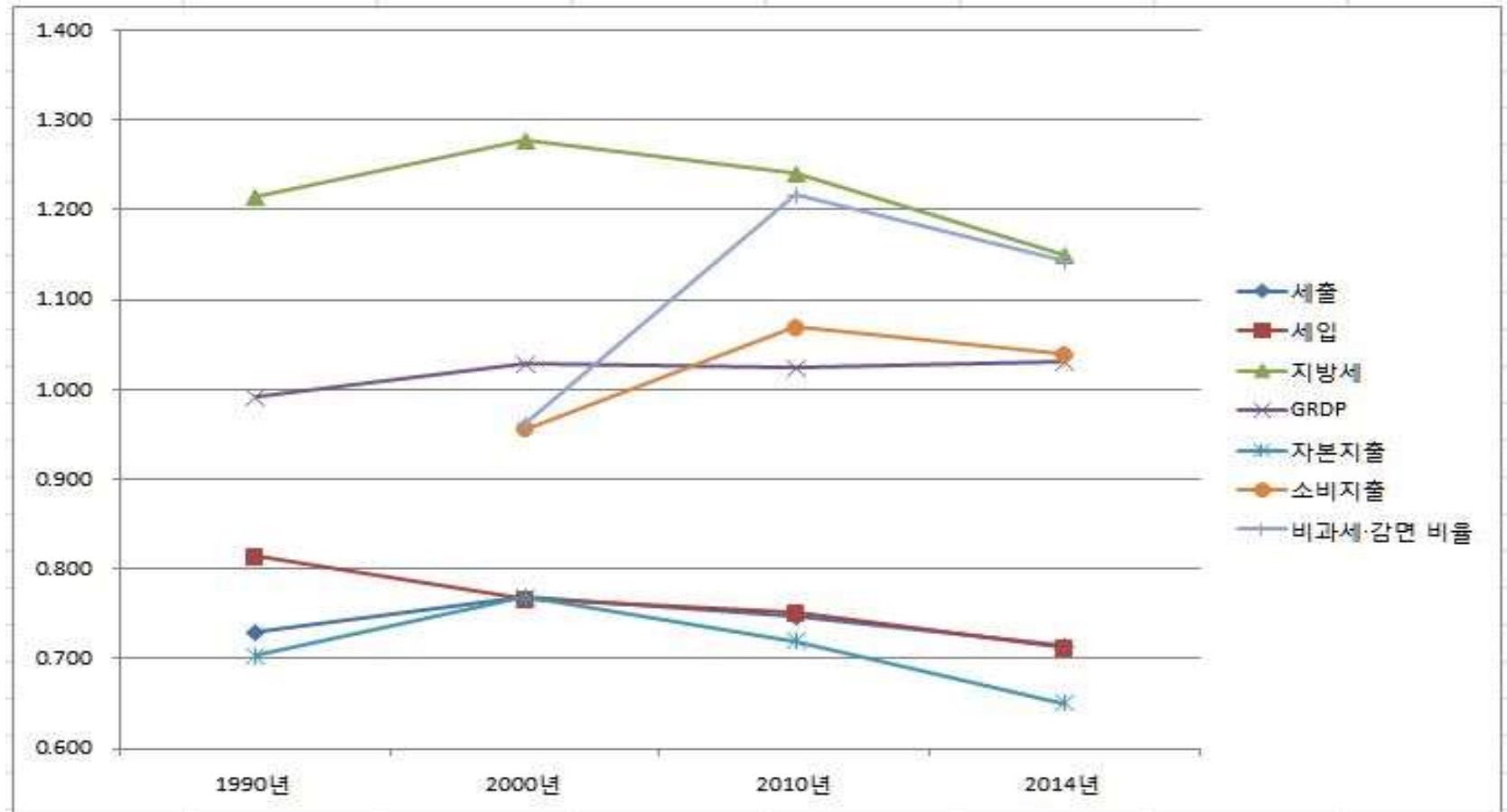
- 시·도별 지방교부세의 증장기 지역간 격차는 총액·1인당 기준 모두 확대 후 완화 경향
 -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감안하면 형평화 기능 약화 시사
- 진단과 의미: 재정형평화 기능 약화와 자원보장기능 강화, 비수도권 중·대도시 자본지출 자원보강 가능성

<표 16> 시·도별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격차 변이계수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총액	0.874	0.962	0.781	0.777
1인당	0.875	0.946	0.833	0.836
서울(수도권) 비중, %	0.5(9.9)	0.1(7.7)	1.0(9.9)	0.8(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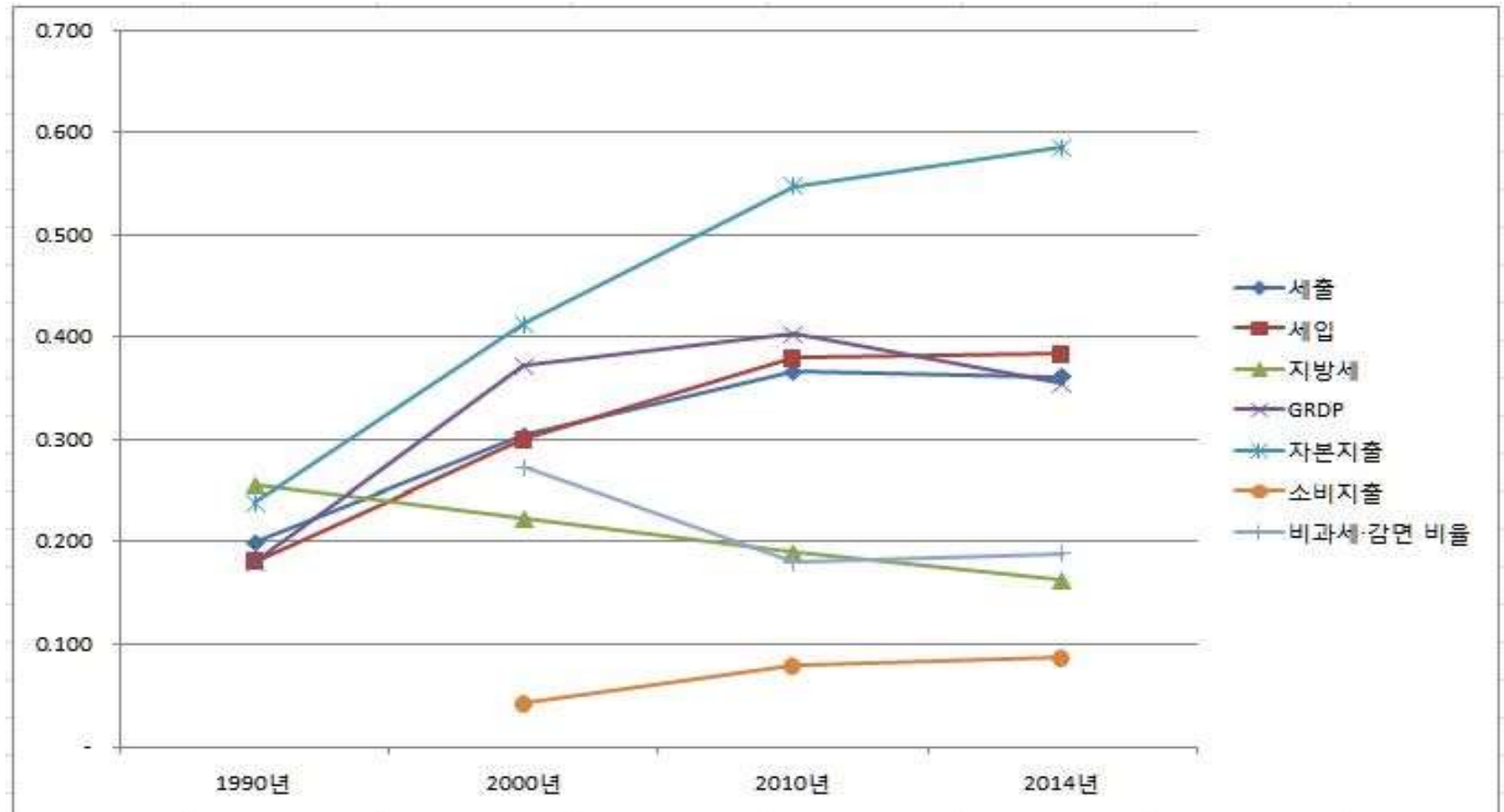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그림 5> 주요 지표(변이계수) 변화 추이(총액 기준)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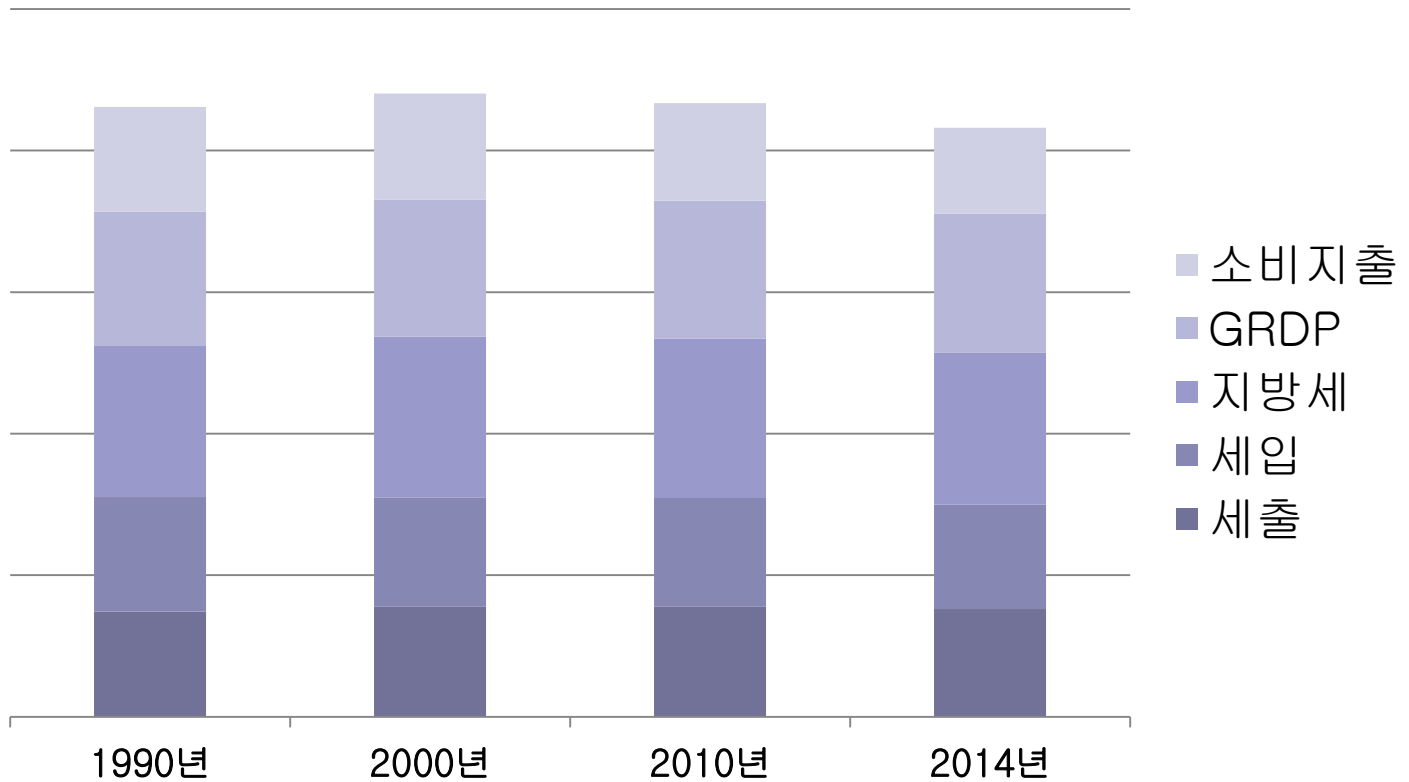
<그림 6> 주요 지표(변이계수) 변화 추이(1인당 기준)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그림 7> 서울, 수도권 점유비중(주요 변수)



II.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 시·도별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상관관계 분석결과 지역경제성장을 대표하는 GRDP 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지방재정 및 정부간 재정관계 변수로는 지방세수입과 자본지출이 있음
- 1인당 GRDP와 주요 지방재정변수의 1인당 자료 대상: 지방세 수입 연도별 0.5 내외, 자본지출 0.15, 지방세 비과세·감면 0.3 내외

<표 17> GRDP(1인당, 총액)와 주요 지방재정 변수(1인당, 총액)의 상관관계(2014)

	지방세입	지방세	지방세출	지방교부세	자본지출	비과세·감면
1인당	0.164	0.463	0.128	0.093	0.167	0.318
총액	0.916	0.985	0.948	-0.038	0.710	0.980



IV.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향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향

□ 지방세 제도 개선

- 과세 자주권 신장: taxing power 신장, 과표 조정권 부활
- 국세 편중 구조 개편
- 지방세 정책 과세 기능 최소화
- 지방세 조세 인센티브 기능 강화
- * 종합: 세입분권(revenue decentralization) 강화

□ 재정이전제도 개선

- 지방교부세 등 일반보조금(general grant) 강화
 - 일반보조금의 지역경제/지역 선호사업 활성화 유도
- 특별교부세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일부 block grant화 가능)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matching rate) 합리화: 단순·적정화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개편
- 경상보조/자본보조 시스템 도입: capital grant 특화, 지방의 자본예산시스템(capital financing system) 도입
- 부처(기능)간, 보조금제도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연계·통합



IV.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향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향

□ 지방채 수단 활성화

- 건전재정 범위 내의 지방채 발행 허용(* 지방 자율성 제고)
- 지방채 발행한도 상향조정; 재정력 대비 광역·기초단체 차등 접근

□ 기타 지방재정정책 및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성장

- 재정투명성(transparency) 강화
- 정보 비대칭 해소
- 부정·부패 방지 및 감소 노력
- 예산회계시스템 개혁(공공투자 효율성 및 형평성 향상)
- 성과관리시스템(공공투자 효율성 향상) 실천
- 튼튼한 중기재정(지출)계획의 수립·이행(지속적, 예측가능한 공공투자 유도)
- 적극적 규제완화



<부록>

<표 1> 지역내 총생산(GRDP) 및 실질성장률 현황

(단위: 십억원, ()는 실질성장률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1,265,146	1,330,888	1,377,041	1,430,255	1,484,542	경기	266,562	276,155	288,147	313,671	329,449
	(6.6)	(3.5)	(2.3)	(2.8)	(3.3)		(9.7)	(3.6)	(2.9)	(4.6)	(5.6)
서울	289,719	303,813	313,479	318,607	327,607	강원	30,628	32,438	33,853	35,357	36,886
	(3.0)	(3.0)	(2.0)	(0.9)	(2.2)		(4.0)	(3.5)	(1.5)	(3.6)	(2.4)
부산	63,737	66,648	67,999	70,338	73,744	충북	39,470	42,489	43,628	47,402	49,137
	(4.5)	(2.0)	(3.0)	(1.8)	(3.6)		(8.2)	(6.2)	(2.0)	(7.4)	(4.4)
대구	38,580	41,448	43,021	44,754	46,592	충남	83,167	91,816	95,308	99,154	103,740
	(7.1)	(3.4)	(2.7)	(4.6)	(3.8)		(11.8)	(6.8)	(3.6)	(6.5)	(4.9)
인천	60,708	61,854	62,208	64,654	68,374	전북	36,632	39,960	40,432	42,513	44,623
	(10.7)	(1.6)	(0.7)	(2.3)	(3.1)		(4.8)	(3.3)	(-0.1)	(3.1)	(2.7)
광주	26,401	27,789	28,914	29,763	30,998	전남	59,901	62,689	64,642	62,289	63,095
	(7.7)	(3.7)	(1.0)	(3.7)	(3.4)		(7.6)	(1.5)	(3.8)	(-0.8)	(0.5)
대전	27,632	29,684	30,884	31,456	32,737	경북	80,839	82,276	85,401	89,132	91,653
	(6.6)	(3.9)	(1.2)	(1.3)	(3.1)		(6.7)	(1.8)	(3.2)	(1.3)	(2.5)
울산	62,852	68,748	70,783	68,348	69,548	경남	87,419	91,233	95,635	99,619	102,484
	(4.7)	(6.5)	(2.1)	(1.1)	(1.5)		(4.8)	(2.7)	(0.9)	(2.0)	(1.5)
						제주	10,899	11,847	12,707	13,198	13,894
							(2.3)	(5.1)	(5.2)	(5.1)	(4.8)

자료: 통계청



<부록>

<표 2> 지방교부세 시·도 지역별 배분실태(2014): 총액, 지역별 점유비중(%)

	지방교부세(순계, 백만원)	지역별 점유비중(%)
서울	279,504	0.8%
부산	1,252,246	3.5%
대구	1,097,229	3.1%
인천	662,460	1.9%
광주	650,325	1.8%
대전	564,289	1.6%
울산	269,785	0.8%
경기	2,798,200	7.8%
강원	3,716,086	10.4%
충북	2,657,837	7.4%
충남	3,102,357	8.7%
전북	3,416,559	9.6%
전남	4,930,776	13.8%
경북	5,698,386	16.0%
경남	3,589,215	10.0%
제주	1,030,627	2.9%
합계	35,715,881	100%

주: 행정자치부 자료를 토대로 산정

<부록>

<그림 1>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주요 지방재정이전제도 변화(1991-2015)

지방재정이전제도	연도			비고
	1991년	2005년	2015년 현재	
I. 지방교부세 계열				일반 형평성
	• 보통교부세			특정 효율/형평성
	• 특별교부세			특정 효율성
	• 분권교부세	(2005-2013)		특정 형평성
	• 부동산교부세	(2006-현재)		특정 효율성
• 소방안전교부세			(2015)	
II. 국고보조금 계열				특정 효율성
	• 국고보조금	(1991-2004)		특정 효율성
	• 지방양여금		(2005-2009)	특정 효율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0-2014)	특정 효율/형평성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
• 지역발전특별회계				
III. 기타			(2010-현재)	특정 효율/형평성
• 지역상생발전기금				

자료: 임성일(2015)

감사합니다!
Thank You!